

# “李·김민석 나와라” vs “尹 나와라”... 내란 국조특위 신경전

〈與〉

〈野〉

오늘 2차 회의서 증인 채택 예정 국민의힘, 김어준 등 20여명 추진 민주당 “尹 채택 방해 위한 與 쫓수” 단독 의결 방침... 출석 가능성은 낮아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승인 김어준씨 등 20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쫓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

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 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강성 지지층에 눈도장?...尹 관저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 40여명, 관저 집회 참석 영남권 등 보수 강세지역 당선 의원 공수처尹 체포영장 집행 불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6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보여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확인된 인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종권·송인석·서일준·서천호·염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집식·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참석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있었다.

이들이 집회에 참석한 명분은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

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출신은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6명, 경남 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9명, 울산 2명, 부산 2명, 비례대표 7명이다.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대구,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의원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아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해 아침부터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1명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나경원의

원을 제외하고 관저 앞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에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 내에서, 주류로서, 앞으로 남은 선거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계 감싸고 국민보단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그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崔대행 탄핵’ 두고 민주당 중진 이견

李, 崔대행에 ‘엄정한 책임’ 강조 박지원 “불만 있지만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

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 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

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한시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소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현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與野,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르면 금주 내 구성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영수국민의힘·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

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인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영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